

# 역으로 시장으로... 통합특별시장 후보들 설 민심 구애

### 행정통합 당위성 홍보·현장 찾아 민심 청취 등 얼굴 알리기 민주, 23~24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다음달 초 예비경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가 유력한 여권 후보들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민심 공략에 나섰다.

입지자들은 자신의 텃밭을 다지거나,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취약 지역을 집중 공략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연휴기간에도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1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장은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광주송정역에서 귀성객들을 직접 만났다. 강 시장은 KTX 호남선 증편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캠페인을 벌이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어 말바우시장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했다.

강시장은 이튿날인 15일에는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17일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설 명절 합동 차례 행사에 함께했다. 강 시장은 방송국 라디오에도 출연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자신의 텃밭인 전남이 아닌 광주로 활동 반경을 넓혀, 시민들을 만났다. 김 지사는 민심 청취라는 이름으로 비교적 자신의 인지도가 낮은 광주에서 얼굴 알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광주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 광주송정역 등을 연이어 방문하며 '광주 행보'를 이어갔다. 다음날인 15일에도 호남 최대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로부터 민심을 비웃,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가까운 거리에서 '광주 민심'을 살폈다. 광주-전남 행정 통합으로 눈코 뜰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있는 양 사·도지사는 설 연휴를 백분 활용한 모양새다.

통합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지역구와 광주를 두루 살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시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건넸으며, 같은날 장성을 방문한 정정래 민주당 대표와 함께 백양사를 찾은 뒤 민심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 내 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잇따라 방문하는 행보를 보였다.

신정훈(나주·화순) 의원도 연휴 첫날인 14일 나주 목사골 시장을 찾은 뒤 광주로 이동해 광주송정역에서 귀성객들을 맞이했다. 이어 15일과 16일 각각 광주 양동시장과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얼굴을 알렸다.

민형배(광산구 을) 의원은 외연확장에 나섰다. 민 의원은 광주지역 시장 방문에 이어 구례·곡성·목포·영암 등지의 전통시장과 행사장을 방문해 전남 민심에 귀를 기울였다.

주철현(여수 갑) 의원은 지역구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였다. 주 의원은 광양 중마시장과 여수 전통시장을 찾았고, 이순신대교 위에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상황을 언급하며 지역 제조업 침체와 경제 위기를 강조했다.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별다른 민심 행보는 없었으나, 선거 전략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시장 후보군들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24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초 예비경선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후 본경선 등을 거쳐 4월 20일까지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설 민심 및 향후 과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 한병도 "3·4월 매주 본회의...사회 대개혁법 처리"

### 민주 원내대표 기자 간담회...3차 상법 개정·검찰 개혁 조속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고, 3월과 4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는 아동수당법과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법 등 민생법안을 이달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24일 본회의의 추진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상법과 행정통합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며 "공소장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법개혁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들고나오거나 국회 파행을 유도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필리버스터법' 재개정 통해 돌파하겠다"며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원내대표들이 각 상임위를 전담 마크하면서 처리 과정을 쟁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벚꽃이 필 때면 국민에게 '민생 회복'과 '민생 개선'이라는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돈봉투 무죄' 송영길, 민주 복당 신청

###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의지...정치 행보 관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나무당 해산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복귀를 선언한 그가 당적 회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송 대표는 18일 광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정식으로 복당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당 절차를 거쳐 당원이 되는 것이 먼저이고 이후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향후 행보를 정하는 것이 맞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인천 계양을 출마를 확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다소 앞서 나간 해석"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최종 목적지는 국회"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역 정가 일각에서 제기된 광주시와 전

남도 행정통합 단체장 등판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송 대표가 당에 복귀하면서 곧바로 정치 일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이정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과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압수물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 2021년 당내 선거 과정에서 6650만원을 살포하는 데 참여한 혐의를 비롯해 먹사연을 통해 8억 63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쟁취한 혐의,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이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대구 광역단체장 결선투표 도입하자"

### 혁신당, 6·3 지선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 금지법 시범 도입 제안

조국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와 대구 지역에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와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 금지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특정 정당에 지역 정치를 독점하는 구조를 타파하고, 무투표 당선으로 인한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 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정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서 원내대표는 현재의 지방정치가 특정 지역에서 단일 정당에 의해 행정과 의회가 독식되면서 기본적인 견제와 균형 장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개혁 진영이 힘을 합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천 과정의 부패를 막기 위한 법안 처리와 함께 광주시 및 대구 지역을 대상으로 결선투표제와 무투표 당선 금지법을 우선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당의 이번 제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안고 있는 무투표 당선 제도(2025년 11월 3일 광주일보 3면)의 맹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현행 선거법 제275조에 따르면 단독 입후보 등으로 무투표 당선에 예정된 후보자는 명함 배포나 벽보 게시 등 모든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이나 자질을 전혀 검증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실정

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490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해 제7회 선거(89명)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더욱이 광주시와 전남도, 대구와 경북 지역에 전체 무투표 당선자의 29%가 집중됐다.

당시 무투표 당선된 광주지역 출마자 12명이 선거운동 전면 금지에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밖에도 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와 관련해 집권 여당을 심판하고 지역 정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의 연합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부의 혼선으로 인해 연대 정권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